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영향 요인: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Impacts of Factors of Welfare Attitude for Social Workers in Seoul

박지영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i-Young Park(bijou12@daum.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기 요인과 복지태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복지대상별 사회복지시설을 무작위로 균등 할당하여, 406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은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의 태도가 일치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이데올로기 요인의 설명력이 사회화 요인과 자기이해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복지의 규범과 가치 특성인 분배지향적인 평등주의 이념이 긍정적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배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복지재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복지태도 | 복지태도의 경향성 | 사회복지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tendency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Based on Survey data,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how socialization patterns, self-interest, and value and norm influence attitudes towards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interest theory has a limit to explain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Second, Ideology factor has an impact on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In other words, egalitarian social workers have more pro-welfare attitudes.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value of equality in welfare policy and program.

■ keyword : | Welfare Attitudes | Tendency of Welfare Attitudes | Social Workers |

I. 서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경험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정책은 시대와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의해 변화되어 왔으며[1], 이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의식 혹은 태도의 변화

접수일자 : 2015년 11월 17일

수정일자 : 2015년 12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29일

교신저자 : 박지영, e-mail : bijou12@daum.net

가 복지정책 형성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과거 복지국가의 정당성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으로 이해되었으나, 복지국가의 발전과 쇠퇴 그리고 재편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정책 개입이 요구되더라도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책구현에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해왔다[4-7].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변화 및 발전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건강보험의 통합, 노인연금제도 도입과 무상 보육 및 교육 대상자 축소, 국민연금 확대 및 개편 등의 복지정책 시행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간의 갈등과 충돌 등 대립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복지납세자와 복지수혜자로서 분리되는 국민의 합의와 동의 과정이 부재된 상태에서 복지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복지제도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 정도 및 그러한 지지가 현실 정치 속에서 정치적 행위나 의사결정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적인 복지제도 발전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복지친화적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8]. 이와 같이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정치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복지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집단의 역동을 규명하고, 복지제도의 미래예측가능성 및 복지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분석이 요청된다[9].

복지태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내에서도 복지태도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복지태도에 대한 구성개념을 파악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4][8][10], 복지태도에 대한 양상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로서 사회집단별 복지태도 실태에 대한 연구들과[5][9-17], 복지태도의 이중성 연구들[10][18][19], 마지막으로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5][6][20-24]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

은 공통적으로 복지태도 측정을 통해 복지제도 및 복지 지출,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 혹은 태도 등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구현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복지태도 구성범주를 단일차원으로 분석에 활용하여 복지태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대다수 연구들이 계급중심논의[5][6][20-22][24] 혹은 복지지위체계논의[9][25][26]로 복지태도간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계급 및 지위요인 이외의 영향요인과 복지태도간의 인과론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복지태도 결정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복지정책에 대한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이해요인이나 이타주의 혹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대별되는 이데올로기요인 등을 실증적으로 논증하지 못하고 복지태도에 대한 평면적 해석을 제공하는데 그치고[27] 있어, 친복지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 집단별 복지태도 실태에 대한 연구들 대다수가 일반인의 복지태도 분석[9-13]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일반적인 복지태도를 측정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나, 복지태도에 계급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지위¹에 기초할 경우[25] 연구대상이 복지납세자지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서비스 주체로서 복지수혜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화하며, 복지정책의 결정이나 관련 쟁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복지납세자 지위의 일반인들과는 복지태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복지태도는 복지제도 및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어 관련

1 복지지위란 복지정치 메카니즘에서 복지지위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28]. 복지지위는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복수납세자, 복지서비스 대상인 복지수급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위를 각각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25].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태도는 복지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태도의 측정은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계급 및 지위체계 요인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있어 복지태도 결정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복지정책에 대한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요인 등을 실증적으로 논증하지 못함에 따라, 친복지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에 있어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서비스 주체이며, 복지정책의 결정이나 관련 쟁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나, 사회복지사를 연구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관련분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의 경향성과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지태도의 개념과 측정

태도는 특정한 실체에 대한 평가적 반응으로서, 이러한 반응은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며, 그것은 체계화되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는다[29].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쟁점이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태도로서 가치, 태도, 행동지향을 포괄한다[4][7]. 즉, 복지태도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에 대한 규범적 지향성을 통해 복지제도의 효과성과 정당성, 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실천의지와 상호결합을 통해 형성된 학습된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6].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계획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9]. 이러한 특성을 지닌 복지태도를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영역별 또는 구성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지태도에 대한 구성개념과 측정지표는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와 복지지출에 대한 동의 정도 그리고 복지규범 및 분배정의 등의 가치지향성으로서 평등인식을 토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복지대상별로 국가의 책임정도[5][8][17][23][27][30-32]에 대하여 이성균(2002)은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도는 복지수혜대상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는 높지만, 빈곤층과 실업자를 위한 복지책임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 한편, 백정미 외(2008)는 여성일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대다수 연구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27].

둘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7][10][20][21][33-37]에 대해서는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치민(1995)과 김희자(1999)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세에 대한 계급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각 복지제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1][33]. 반면, 김영란(1995)에 따르면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긍정적이라고 제시하였다[20]. 그러나 계급과 계층에 따라 복지영역별 증세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Nau(2003)에 따르면, 실업정책은 고용유무와 소득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정책이나 노령정책은 고용, 실업, 퇴직유무와 소득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셋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서 복지규범 및 분배정의 등과 같은 가치지향성으로서 평등인식[6][7][10]에 대하여 최균 외(2000)는 평등현실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교육기회를 제외하고 취업, 법 집행,

소득 및 재산격차 등의 경우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제시하였다[10]. 주은선 외(2007)는 평등인식에 대하여 주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평등에 대한 인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상위계층일수록 평등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복지태도 구성범주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태도에 대한 구성개념과 측정지표는 복지대상 집단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치와 이념지향으로서 평등인식 등을 기초로 하여 다차원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 복지재정의 확충 그리고 복지기능의 정당성 등 다섯 가지 영역[9]으로 확장하고, 제범주화 하여 복지태도 개념을 구성하였다.

2. 복지제공자의 복지태도

안상훈(2002)은 복지의무와 권리차원에서 복지관련 지위를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있는데,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지위로서 복지납세자, 복지정책의 수급자로서 복지수혜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자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복지지위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25]. 국가복지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관련 행정 및 서비스부분이 팽창하게 되고, 이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세 가지 차원의 복지지위 중 복지제공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복지제공자의 복지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복지제도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 상황과 문제의식, 복지범위의 선택, 정책형태 및 내용, 비용부담 방법 등[38]에 대하여 복지제공자 개인의 복지태도가 공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과 둘째, 복지제도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셋째, 복지제도의 정당성은 복지정책의 성과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복지제공자들의 복지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복지제공자는 복지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적부문과 민간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의 대표적인 복지제공자로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복지제공자에 대한 복지태도 연구는 복지태도의 구성개념 및 측정지표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히 다루어진 영역으로, 선행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14-16][26][38].

우선 공공부문의 복지제공자로서 공무원의 복지의식 혹은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김성한(1990)은 보건사회부 사회영역에 근무하는 관료를 대상으로 사회가치, 경제성장과 분배, 의료, 주택, 교육, 소득보장, 실업문제, 복지책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14], 이봉화(1991)는 일반 행정직 복지담당자 및 복지직의 복지의식 편향성을 분석하였고[15], 정동일(2003)은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의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불평등 의식이 강하게 있으며,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은 국가책임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사회복지의 효과는 공동체적 연대감증진과 이타심 발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최근의 구혜영(2015)의 연구는 이타적 가치관, 평등인식도, 노후준비도 요인이 과천시 공무원들의 복지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3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복지의식 수준에 따라 공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복지의식과 태도를 검증함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의식 및 태도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 단선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회복지사는 민간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제공자 지위를 가짐에 따라, 복지수혜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복지제도 구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복지정책의 결정이나 관련 쟁점 해결방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공무원과는 다른 복지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복지태도는 중요성을 가진다[9]. 그러

나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관한 국내 관련 연구로는 현의성(2013)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26]. 현의성(2013)은 경남지역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연구한 결과, 복지제공자 지위로서 성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복지태도 분석에 있어 이론과 측정지표의 관련성 등에 있어 논리성이 취약하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기술통계분석과 차이분석 그리고 단순상관관계 분석만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평면적이고 피상적이었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대상으로서 서울지역 민간영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의 경향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와 복지이론을 기초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3.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초기에는 주로 직업과 사회계층별 복지태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고, 이후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복지지위론에 기반을 두고 복지태도를 측정하였다. 최근에 이러한 계급 혹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복지태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태도에 대한 이중성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초기 연구들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계층별, 직업별 복지태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5][6][8][14-16][20-23][27][29]. 안치민(1995)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대변되는 신중단계급이 구중단계급에 비해 복지의 사적책임을 더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21]. IMF 이후, 김신영(2010)의 연구에서도 계층의 지위가 높을수록 친복지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구중단계급이 노동자계급보다 국가의 복지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 반면, 계급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들도 나타났다. 조돈문(2001)은 계급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이유를 자본계급의 왜곡된 복지인식과 태도 즉, 자본계급이 자신들의 복지부담까지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이들의 복지의식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22]. 주은선 외(2008)는 국내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불투명한 경계,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빈민화로 인한 노동자계층의 동질성 약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6]. 이상의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계급별 복지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을 제공하지만, 계급이나 직업에 따른 복지태도 차이에 대한 이해가 다소 평면적이고 피상적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복지이해관계를 토대로 복지지위에 기초하여 복지태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서구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의 계급적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31][41]. 이러한 계급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적 계급과는 무관하게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국가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과 사회적 균열에 대하여 복지제도의 특성이나 개인의 자원규모, 복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틀로서 복지지위체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9][23][26][28]. 류진석(2004)은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복지이해관계에 따른 복지태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지수급자에 비해 복지납세자나 복지제공자의 복지태도가 친복지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9]. 복지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복지지위에 관한 안상훈(2002)의 연구는 계급결정론으로부터 일정부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복지태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3].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복지태도에 대한 이중성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다수 연구들은 연구대상의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불일치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10][18][19][29]. 최군 등(2000)은 한국인의 복지실천의지로서 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의 수용정도를 분석 결과, 복지예산확충의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10]. 김사현(2015)은

성, 연령, 교육수준, 고용지위, 소득지위, 복지경험과 같은 객관적 지위와 형평성지각, 보편성선호, 정치성향, 정책평가의 주관적 의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복지비용회피와 복지비용지지의 불일치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복지비용회피 불일치 반응을 보일 확률은 여성과 저연령, 저소득, 대학원 미만 학력, 그리고 비상용직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국내 복지태도 이중성의 실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태도의 경험적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복지태도 분석모델로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기반 및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 단선적 분석 모델을 확장하여,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이기주의 및 이타주의 등의 이념적 지향의 이데올로기 요인을 포괄하여 복지태도 결정구조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 영향 요인을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인으로 범주화 하였다.

먼저, 사회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등의 변수를 포함하며,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의에 대한 신념과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사회화이론의 주된 논거로서, 교육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습득과 내면화를 통해 복지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27].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2]. 성별은 Andress & Heien(2001)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체로 여성은 남성보다 복지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42]. 즉, 사회화의 결과로 여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남성보다 많이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나 복지정책에 동의하는 인성이 발달했다는 것이다[43].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가족보호부담 등으로 남성보다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복지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50]. 즉, 성별이 가치체계 및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상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9][27][43][50]. 연령은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연령이 젊을수록 실업위험성과 저축부족으로 복지프로그램에 의존적일 것이라는 논리에서 이들은 친복지적 성향을 갖는다고 제시한 연구가 있는 반면[6][34], 김신영(2010)은 퇴직노인이나 고령자일수록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 복지국가 지지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8]. Goerres(2007)는 세대를 정치적 가치차원에서 전생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화 세대보다 교육 및 연금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세대와 복지태도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증명했다[44]. 일반적으로 연령과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이해(self-interest) 요인은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진 요인이다[34][35][45-47]. 전술하바와 같이 복지태도의 상이성을 결정하는 사회화 요인은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변수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론은 지나치게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강조한 나머지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따른 개인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기이해 관계는 사회학과 경제학 등 여러 학문에서 인간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자기이해 이론은 복지제도와 결부된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48][49]. 즉, 자기이해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는 복지에 대한 기여와 수급 혹은 수혜가능성과 관련이 있는데, 복지지위에 따라 이해관계와 복지수혜가능성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의 차이로 유발되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국가와 관련한 이해관계는 전통적으로 소득과 고용 관련 변수들이 복지태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8][18]. 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노동자

나 실업자, 또한 복지국가 확대에 따라 사적분야 근로자보다 복지정책과 강한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분야 근로자 등의 특정 집단이 친복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32][35]. 한편, 최근 복지국가 위기 이후 사회적 지위기반 변수로서, 복지이해관계 변수들의 영향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추세이다. 특히 안상훈(2002)은 자기이해에 기초한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제공자라는 지위가 오히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25].

마지막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치차원으로서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태도의 상이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이해관계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자기이해 이론은 서구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변수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이해 요인은 지나치게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므로써,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판단이나 이념 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4][31][35]. 따라서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사회적 자원의 분배나 평등에 대한 인식, 정치적 성향 등 사회정의에 대한 개인의 가치 및 이념적 지향이 복지태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47][51]. 가치차원으로서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사회가치의 근본적인 상이성과 관련되는데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지향하는 입장과 평등, 우애를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복지태도를 분류하고 있다. 즉, 복지와 관련된 가치대립을 복지친화적 가치와 반복지적 가치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복지친화적 가치는 집합주의, 절대적 평등, 휴머니즘,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보장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상호호혜성 또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원조행위를 강조한다. 반면, 반복지적 가치는 개인주의, 적자생존의 논리, 불평등,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로부터의 선택 등으로 개인 책임의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의 주요 원리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10].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요인을 토대로 Hansenfeld & Rafferty(1989)는 평

등한 기회와 인식에 대한 정도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복지태도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34], Andress & Heien(2001)은 평등에 의한 사회의 분배정의에 대한 판단이 복지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22]. 이중섭(2009)은 소득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국가를 만드는 분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복지의식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47].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평등인식 등의 이데올로기 요인이 복지의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복지태도 결정모델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는 첫째, 성, 연령, 교육, 소득 등의 변수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복지태도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연구들과 둘째, 계급중심논의와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기초한 복지 지위의 이론중심적 논의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복지태도 분석모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복지태도 관계에 초점을 둔 단선적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요인과 이념적 지향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복지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제약이크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유용성을 포괄하고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태도 결정모델로서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 연령, 교육 등의 사회화 요인과 복지제도와 관계된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인의 복지태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고용과 소득 등의 자기이해 요인,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었던 사회적 자원의 분배나 평등인식 등 이데올로기 요인을 결정요인으로 한 모델을 설정하고, 이러한 각각의 변수들이 사회복지사의 복지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논의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경향성과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

인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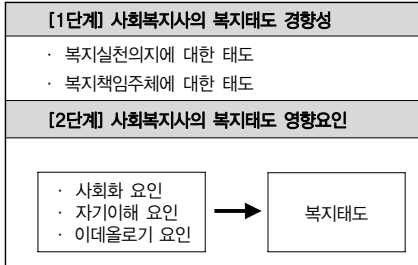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연구문제 1.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경향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기 요인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복지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이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태도 영향요인 중 지역 특성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39][40]. 복지태도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은 문화나 가치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의 다양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어 특히, 도시와 농촌은 지역범위, 기능 및 조직, 인적·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별로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구현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규모와 시설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지침, 서울과 지방의 시설운영 환경에 편차가 크고, 종사자의 학력수준과 보수교육의 내용 등이 표준화되지 못한 실정과 조사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예측되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지역의 포괄성을 확보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집절차는 서울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대상별로 정신보건, 노숙인,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동일 규모로 할당하여 편의표집방식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Coughlin(1980)은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특정집단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상이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 아동을 양육하는 취약계층 그리고 실업자 순으로 지지정도에 차이를 보였다[52].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39], 한국인은 복지대상자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복지대상자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공자의 태도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를 서비스 대상별로 균등할당 하였다.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한 설문지 421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406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들의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n=406)	남성	134	33.0	결혼 유무 (n=405)	기혼	200	49.3
	여성	272	67.0		미혼	205	50.6
연령 (n=406)	20대	124	30.5	급여 수준 (천만) (n=405)	2500미만	189	46.6
	30대	146	36.0		3000미만	99	24.4
	40대	83	20.4		4000미만	93	22.9
	50대 이상	53	13.1		4000이상	24	5.9
교육 수준 (n=405)	전문대졸 이하	78	19.2	직위 (n=405)	대리이하	251	61.8
	대학졸업	223	54.9		과장	86	21.2
	대학원 이상	104	25.6		부장	21	5.2
			국장이상		47	11.6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구성하고, 독립변수를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3.1 복지태도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할 수 있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류진석(2004)[9]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조사도구에 포함된 문항수와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hronbach's α 의 계수, 그리고 변수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기능의 정당성은 복지제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기초한 복지기능의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즉, 복지의 바람직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6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은 6점에서 30점의 범위를 가진다. 둘째,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은 복지재정 충당을 위한 세금인상 및 부담에 대한 태도로서, 복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지향과 실천지향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극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5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은 5점에서 25점의 범위를 갖는다. 셋째, 복지원리의 선호성은 복지대상자의 보편 혹은 선별적 지원, 평등지향 혹은 소득비례 급여제공의 지향여부에 따라 복지제공의 범위와 성격, 역할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2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은 2점에서 10점의 범위를 갖고 있다. 넷째, 복지공급의 책임성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선호여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복지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7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은 7점에서 35점의 범위를 갖고 있다. 다섯째, 복지재정의 확충은 복지지지로 연결되는 실천적 지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이라 할 수 있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 값은 7점에서 35점의 범위를 갖고 있다. 이상의 5가지 하위영역을 합산하여 생성한 변수가 복지태도이며, 복지태도의 변수 값은 27에서 135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 의 값은 .784으로 나타났다.

3.2 사회화 요인

사회화 요인은 Address & Heien(2001)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성별, 세대, 교육정도 그리고 연령으로 구성하였다[42].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하여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자료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대졸업이하, 대학졸업, 대학원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세대는 황아란(2008)의 연구에 기초하여 산업화 및 전쟁세대(1957년까지), 민주화세대(1958-1971년), 그리고 신세대(1972년부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51]. 연령은 자료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3.3 자기이해 요인

자기이해 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복지정책의 이해여부에 따른 이해집단인 결혼유무, 고용과 소득에 관련하여 종사상 직위, 소득수준, 자격증 유형 등의 변수들로 구성된다. 결혼유무는 미혼을 기준변수로 더미 처리하여 측정하였고, 종사상 직위는 대리 이하, 과장, 부장, 국장이상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은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25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유형은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였으며, 2급을 기준변수로 더미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3.4 이데올로기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은 개인책임의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호혜성에 입각한 원조행위 또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집합주의로 대별되는 정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Kluegel & Mateju(1995) 등의 논거[50]를 바탕으로 소득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책임, 소득분배에 대한 태도, 현재 경제수준에 비추어 정부의 복지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별로 5

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합주의 혹은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활용하였다. 셋째,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복지태도의 경향성

복지태도는 가치지향성과 행동성향이라는 태도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 간의 상호결합된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10].

1.1 복지실천의지에 대한 태도

복지태도의 행동지향을 나타내는 복지실천의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예산 확보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데, 정부의 복지예산은 복지수혜자의 확대 및 급여의 보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복지실천의지에 대한 태도는 복지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 2]는 복지실천의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응답결과이다.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태도는 찬성이 53%, 반대가 4.2%로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이 복지재정 확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약 43%로 나타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태도가 ‘찬성’한다는 명확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부담 의사는 찬성하는 견해가 63%로 반대하는 견해 1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인식과 증세부담에 대한 의

사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반대하는 견해보다 높게 나타나, 복지실천의지의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태도 및 증세부담태도

	적극 반대	약간 반대	그저 그렇다	약간 찬성	적극 찬성
복지재정확충 태도 (n=406)	0	17 (4.2)	174 (42.9)	181 (44.6)	34 (8.4)
증세부담에 대한 태도 (n=406)	23 (5.7)	33 (8.1)	94 (23.2)	168 (41.4)	88 (21.6)

1.2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도

Esping-Anderson(1990)은 복지국가 발달에 따른 복지체제를 정부, 시장, 개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복지체제가 특정시대와 상황,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태도에 따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제시하였다[41]. 즉,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태도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복지에 대한 가치, 복지정책 대상과 범주에 관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태도의 경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표 3]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책임을 누가 가져야하는가에 대한 태도 분석결과이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책임주체는 정부라는 태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책임도 개인적인 지지망보다 복지수혜자의 책임주체로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자신	가족/친척	이웃	지역사회	정부
가난한 사람 (n=406)	80 (19.7)	28 (6.9)	3 (0.7)	66 (16.3)	229 (56.4)
실업자 (n=406)	79 (19.5)	4 (1.0)	0	47 (11.6)	276 (68.0)
질병이 있는 사람 (n=406)	67 (16.5)	59 (14.5)	4 (1.0)	39 (9.6)	237 (58.4)
여성 (n=406)	44 (10.8)	28 (6.9)	5 (1.2)	87 (21.4)	242 (59.6)
노인 (n=406)	3 (0.7)	62 (15.3)	4 (1.0)	85 (20.9)	252 (62.1)
장애인 (n=406)	1 (0.2)	22 (5.4)	4 (1.0)	82 (20.2)	297 (73.1)
아동 및 청소년 (n=406)	2 (0.5)	79 (19.5)	3 (0.7)	92 (22.7)	230 (56.7)

사회복지사의 복지대상자별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간 차이 유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도 문항에 대한 변수 값은 7점에서 35점까지로 구성된다. 중앙값(median) 28점을 기준으로 7점에 가까울수록 개인책임 지향적이고, 35점에 가까울수록 정부책임 지향적이라는 것으로 평가한다.

분석결과, 복지공급의 책임성에 대한 수준의 평균값은 25.97로,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71로 나타나, 정부책임지향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적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직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은 20대 보다 40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위는 국장이상을 제외하고 직위가 높을수록 국가책임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결혼유무 그리고 급여수준에 따른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인데, 특히 급여 등의 소득수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복지책임주체로서 공적책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7][10][47].

표 4.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n=406)	남성	134	3.83	1.04	1.654
	여성	272	3.65	1.06	
연령 (n=406)	20대	124	3.68	.94	3.241*
	30대	146	3.80	1.05	
	40대	83	3.84	1.12	
	50대 이상	53	3.32	1.18	
결혼유무 (n=405)	기혼	200	3.70	1.08	-4.62
	미혼	205	3.71	1.04	
교육수준 (n=405)	전문대졸업 이하	78	3.38	1.14	6.972**
	대학졸업	223	3.73	1.00	
	대학원 이상	104	3.92	1.06	
직위 (n=405)	대리이하	251	3.67	1.02	4.927**
	과장	86	3.96	.99	
	부장	21	4.04	1.16	
급여수준 (단위:만원) (n=405)	국장이상	47	3.29	1.17	1.949
	2500미만	189	3.59	1.03	
	3000미만	99	3.77	1.03	
	4000미만	93	3.90	1.09	
	4000이상	24	3.70	1.19	

*p<.05, **p<.01

2.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표 5], 복지태도와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최저 -.109에서 최대 .737(p<.01) 사이의 정적(+),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복지태도 영향요인으로서 사회화 요인에서는 세대(r=-.109, p<.05)와 부적상관관계가, 교육수준(r=.168, p<.01)과 성별(r=.128, p<.01)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이해 요인에서는 자격증 유형(r=-.188, p<.01)은 부적상관관계가, 소득수준(r=.151, p<.01)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데올로기 요인은 경제수준 대비 복지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태도가 사회화 요인과 자기이해요인보다 이데올로기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복지태도	1											
성별	.128**	1										
연령	.031	.066	1									
교육수준	.168**	.035	.033	1								
세대	-.109	.027	.737*	.065	1							
결혼유무	.024	.056	.188	.038	.154	1						
직위	.012	.016	.488	.202	.352	.150	1					
소득	.151	.097	.186	.370	.040	.013	.282	1				
자격유형	-.188	.091	.315	.389	.300	-3.069	.010	.224	1			
소득격차분배태도	.312	.042	.058	.168	.019	-.020	.018	.093	.162	1		
복지예산	.377	.083	.035	.174	.028	.050	.086	.114	.086	.288	1	
적절성	.395	.064	.128	.219	.163	-.025	-.013	.146	.158	.295	.215	1

*p<.05, **p<.01, ***p<.001

복지태도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실시를 위하여,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독립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가 .80이하이며, 독립변수들의 분산확대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1.045~2.920이 범위로 다중공선성 진단기준인 10이하로 나타났다[52]. 아울러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토할 수 있는 Durbin-Watson 계수도 1.796으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표 6], 사회화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성별과 교육수준, 세대요인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 결정요인으로서 성별 분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복지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Svallfors(1995)의 연구결과[35]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제공주체로서 사회복지사가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와 정적관계를 갖는다는 류진석(2004)의 연구결과[9]를 지지하는 결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화 과정을 통해 친복지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 교육수준, 그리고 세대에 의해 형성된 태도나 신념이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럽 등의 사회화론이 한국사회에서도 유효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42]. 사회화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의 조정계수는 4.6%이고, F값은 5.899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자기이해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에서는 결혼유무($p < .05$)와 자격증 유형($p < .05$)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유무에 따라 기혼자집단과 미혼자집단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기혼자집단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보금자리주택 자격부과 등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혼자집단은 미혼자집단과 비교할 때, Pettersen(2001)에 의한 수요이론(demand theory)에 근거[53]하여 분배원칙에 대한 개인의 지지성향이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기혼자집단이

미혼자집단에 비해 친복지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이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 부문에 비하여 낮은 반면, 서울 지역의 생계비 지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더욱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격증 유형 변수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성과 소득 등 개인의 계층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결정요인[54]으로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즉,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유형에 따라 근로형태(정규직 유무)와 고용안정성, 그리고 소득수준 차이 등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며 이러한 이해관계 요인이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기이해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조정계수는 2.4%이고, F값은 3.427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이데올로기 요인을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정도($p < .01$), 소득분배 인식 정도로서 분배태도($p < .001$), 그리고 경제수준 대비 정부 복지예산의 적절성 정도($p < .001$)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luegel & Mateju(1995)의 연구[50]를 지지하는 결과로, 사회복지사가 평등주의(egalitarian)적 분배가치를 지향할수록 복지태도가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정부의 복지예산 수준이 낮아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데올로기 요인을 투입한 모형 3의 조정계수는 23.9%이고, F값은 43.120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마지막으로,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 4에서는 사회화 요인의 성별($p < .01$), 자기이해 요인의 결혼유무($p < .05$), 이데올로기 요인의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정도($p < .01$), 소득분배인식 정도로서 분배태도($p < .001$)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작용하였다.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교육수준과 세대는 자기이해 및 이데올로기 요인을 통제할 경우 변수의 효과

가 사라졌다.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의 영향력은 사회화 요인 및 자기이해 요인과 비교하여 이데올로기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구의 복지태도 설명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논증된 자기이해 요인의 설명력이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독립변인을 투입한 모형 4의 조정계수는 7.1%이고, F값은 3.760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표 6.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t	β	t	β	t	β	t
사회화 요인								
성별	.119	2.436*					-.127	-2.572**
연령	.068	.929					-.032	-.389
교육수준	.152	3.096**					.053	.935
세대	-.148	-2.022*					-.006	-.085
자기이해 요인								
결혼유무			-.115	-2.295*			-.118	-2.374*
직위			-.047	-.896			-.023	-.387
소득수준			-.098	-1.853			-.088	-1.553
자격유형			.119	2.338*			.108	1.868
이데올로기 요인								
소득격차					.144	3.069**	-.139	-2.626**
정부책임					.229	4.990***	-.103	-1.996*
분배태도								
복지예산					-.309	-6.706***	.028	.526
적절성								
상수	31.548***		65.498***		22.196***		23.649***	
R ²	.236		.182		.245		.310	
수정된 R ²	.046		.024		.239		.071	
F	5.899***		3.427**		43.120***		3.760***	

*p<.05, **p<.01, ***p<.001

V. 결론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지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태도에 관한 실증연구는 복지제도의 정당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9].

본 연구는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과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이 유효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은 복지태도의 행동지향성을 나타내는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인식으로서 복지책임주체의 태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태도는 일치하며,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이와 관련하여 증가한 세금부담을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체제로서 개인과 이웃, 지역사회보다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사는 복지책임주체로서 정부책임 지향적이라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구나 사회적 특성별 집단간 복지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40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위는 국장이상의 집단을 제외하고 직위가 높을수록 정부책임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는 복지책임주체와 실천의지간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복지책임주체로 인식하고 있어 집합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11].

둘째, 복지태도 결정모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인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복지태도에 관한 결정모델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중심적인 접근 또는 이론적 관점에서 계급중심논의로 구성되어 복지태도를 단선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복지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사회화 요인과 사회적 지위 및 복지지위 변수 등 상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자기이해 요인,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이념적 성향에 의해 복

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 요인을 통합한 분석모델이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데 보다 유용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화 요인(모형 1)인으로 성별, 교육수준, 세대 변수와 자기이해 요인(모형 2)인으로 결혼유무와 자격증 유형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인(모형 3)으로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정도, 소득분배인식 정도로서 분배태도, 경제수준 대비 정부복지예산의 적절성 정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화 요인, 자기이해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 4에서는 사회화 요인으로 성별, 자기이해 요인으로 결혼유무, 이데올로기 요인으로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정도과 소득분배인식 정도로서 분배태도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이데올로기 요인 중 소득분배인식 정도로서 분배지향성 요인의 영향력이 우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는 개인주의 및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이념보다는 집합주의, 평등주의, 상호호혜성 또는 공동체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개입의 초점으로 '소득분배인식 정도로서 분배지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축소는 역사의 산물이라는 사실[55]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가 복지정책의 확대를 수용하는 근거에는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를 우선하고, 이기주의보다 이타주의를 우선하는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신장 등의 자기이해 요인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분배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복지친화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배지향성을 기초로

한 사회복지사 육성을 위해 기존의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복지윤리와 철학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재분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복지사의 가치 확립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의 기틀을 확립할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수준에 비해 정부의 복지예산 투입수준이 낮다는 복지태도를 고려할 때,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복지정책 및 재정정책 수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V. George and P. Wilding, *Welfare and Ideology*, Person Education Limited London, U. K., 1994.
- [2] B. I. Page and R. Y. Shapiro,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ubl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7, pp.175-190, 1983.
- [3] C. O. Jone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3rd ed),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4.
- [4] P. Taylor-Gooby,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tate welfare*, Routledge Kegan & Paul, 1985.
- [5] 우아영,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급간 비교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6] 주은선, 백정미, "한국인의 복지의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pp.203-225, 2007.
- [7] 이한나, 이미라,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pp.254-286, 2010.
- [8] 김신영,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1권, 제1호, pp.87-105, 2010.
- [9] 류진석,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4호, pp.79-101, 2004.
- [10] 최균, 류진석,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제16호, pp.223-254, 2000.

- [11] 김상균, 정원오, “90년대 한국인의 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5권, pp.1-33, 1995.
- [12] 양옥경,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 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1권, pp.229-256, 2002.
- [13] 허만형, “이데올로기 정향분석: 서울시민의 복지 의식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3권, 제2호, pp.99-118, 2009.
- [14] 김성한, *보건사회부 관료의 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5] 이봉화, *복지행정공무원의 의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16] 정동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지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7] 박병현, 홍봉선,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22호, 1995.
- [18] 서재욱, 김윤태,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1호, pp.95-121, 2014.
- [19]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1권, 제1호, pp.27-57, 2015.
- [20] 김영란, “이데올로기와 복지태도,” 고려사회학논집, 제9권, pp.229-249, 1995.
- [21] 안치민,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사회와 문화, 제9권, 제1호, pp.211-227, 1995.
- [22] 조돈문,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1호, pp.157-191, 2001.
- [23] 이성균, “한국사회 복지 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pp.205-228, 2002.
- [24] 안상훈,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1호, pp.163-192, 2009.
- [25] 안상훈, “계급정치의 희석과 복지국가의 대안적 방어기제: 복지지위모형에 대한 거시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9권, 제1호, pp.159-181, 2002.
- [26] 현외성, “민간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태도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21권, pp.69-95, 2013.
- [27]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복지인식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제37권, pp.319-344, 2008.
- [28]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출판, 2005.
- [29] 김사현,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30] 이인재,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지연구, 제12권, pp.205-228, 1998.
- [31] S. Svallfors,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38, No.2, pp.119-138, 2004.
- [32] M. Blekesaune,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wards welfare state policies,” *ISER Working Paper*, pp.06-45, 2006.
- [33] 김희자,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 *사회복지정책*, 제8권, pp.106-124, 1999.
- [34] Y. Hansenfeld and J. A. Rafferty,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Vol.67, pp.1027-1048, 1989.
- [35] S. Svallfors,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 a Sociological*, Vol.38, pp.53-74, 1995.
- [36] S. Nau, *The moral economy of welfare states: Britain and Germany compared*,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3.
- [37] F. Cybelle, “The Changing Color of Welfare?”

- How Whites' Attitudes toward Latinos Influence Support for Welfare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10.3, pp.580-625, 2004.
- [38] 구혜영, "공무원의 복지인식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0권, pp.1-27, 2015.
- [39] 함철호, 이중섭, "지역별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pp.299-325, 2010.
- [40] M. Blekesaune and J. Quadagno,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ISER Working Paper, pp.06-45, 2003.
- [41] G. Esping-Anderso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1990.
- [42] H. J. Andress and T. Heien,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17, pp.337-56, 2001.
- [43] J. T. Scott, et al, "Just deserts: an experimental study of distributive justice No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5, No.44, pp.749-767, 2001.
- [44] A. Goerres, *Demands for welfare state provisions by a powerful generation: comparing British and German baby-boomers*,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7 Bi-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consortium of political research, September, pp.6-8, 2007.
- [45] F. Groskind, "Ideological Influences of Public Support for Assistance to Poor Families," *Social Work*, Vol.39, No.1, pp.81-90, 1994.
- [46] M. Blekesaune and J. Quadagno, "Public attitudes towards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19, No.5, pp.415-427, 2003.
- [47] 이중섭,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73-99, 2009.
- [48] P. Pierson,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박시중 역,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레이건, 대처, 그리고 축소의 정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4.
- [49] P. Pierson,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 2001.
- [50] J. R. Kluegel and P. Mateju, "Egalitarian vs. Inegalitarian Principles of Distributive Justice," In: R. James, D. Kluegel, and Wegener, B(Hg.),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 in Capitalist and Post-Communist States*, Berlin: Walter de Gruyter, pp.209-238, 1995.
- [51] F. Koster, "The European union's impact on welfare state attitudes: a longitudinal and multilevel investigation," Paper prepared for the 38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budapest, June, pp.26-30, 2008.
- [52] R. M. Coughlin, *Ideology, Public Opinion and Welfare Policy: Attitudes towards Taxing and Spending in Industrialized Societies*,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0.
- [51] 황아란, "정치세대와 이념 성향: 민주화 성취 세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5권, 제2호, pp.123-151, 2008.
- [52] 송지준, *SPSS/AMOS통계분석방법*, 21세기 세계사, 2014.
- [53] P. A. Pettersen,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 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24, No1, pp.24-49.
- [54] C. S. Lipsmeyer and T. Nordstrom, "East versus West: comparing political attitudes and welfare preferences across European societi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Vol.10, pp.339-364, 2003.

[55] 홍선미, “사회복지사의 이데올로기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11-335, 2004.

저 자 소 개

박 지 영(Ji-Young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1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11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아동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지역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교육